

동계오륜 정부지원폭 '축각'

올림픽특별법 시행령 차관회의 거쳐 14일 최종 결론

막판 진통을 거듭했던 2018평창 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9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8일 도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두 차례 열린 차관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던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이 9일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관련기사 3면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시행령 검토 안건이 제외되는 동안, 도 정치권과 도는 대정부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벌여 도가 요구한 개·폐회식장에 대한 국비지원 등 일부 핵심 사안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개·폐회식장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는 대회 관련 핵심시설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인 대회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시하는 경우,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시한다'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비 지원율이 확실하게 명시되지는 못했지만 12월 대선 국면을 활용해야 대선 공약화 등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도와도 정치권의 향후 활동에 따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기업 우대 조항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간 협의를 통해 장관 고시 등으로 정해진다. 식수전용 저수지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환경부 소관 업무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소관 광역특별회계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업 완료를 위해 1531억원이 필요해 도는 반드시 국비 70% 이상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 향후 조율이 주목된다.

서울/박지은

평창동계올림픽 시행령 오늘 차관회의 상정

시설 국비 지원비율 명시 안돼

정부, 형평성 논란에 부담 느껴
반면 개·폐회식장 지원은 포함
“절반의 성공” 정치력 결집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행령이 9일 차관회의에 상정돼 이달 중순 공포된다.

8일 도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견조율이 끝나 이날 차관회의와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께 대통령 재가 및 공포가 있을 전망이다.

이 시행령에는 기재부가 줄곧 반대해왔던 개·폐회식장 국비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림픽 메달 프라자, 선수대기시설, 안전통제센터 등 대회 부대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9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기재부가 ‘모든 지원조항을 삭제하라’는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도 핵심요구사항이었던 평창올림픽 대회 관련시설과 올림픽특구 내 경관 형성 정비 대상에 대한

70% 및 50% 이상의 국비 지원은 결국 명문화되지 못했다. 단, ‘기재부장관이 국비 지원율을 정하고 문화부장관이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인천 아시안게임 등 타 국제경기대회와의 형평성 논란에 따라 지원비율을 명시하는데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이다. 향후 도와 도 정치권이 의지 및 정치력을 발휘해야 지원비율을 대폭 높일 수 있다.

이 밖에 대회시설 건립과정에서의 지역업체 우대조항은 장관 고시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4대강 정비사업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지역업체를 우대했고, 역시 향후 도의 대응 및 정부 의지에 따라 지원 폭이 결정날 전망이다. 식수전용저수지는 환경부 소관 사업이라는 이유로 시행령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 정가 관계자는 “도가 요구했던 모든 사항이 담기진 않았지만 개·폐회식장이 들어가는 등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 같다”며 “향후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더 많은 지원조항을 얻어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민왕기기자

“최악 면했지만 재정부담 커질수도”

개·폐회식장 국비 지원 가능... 지원을 명시 안돼 “장·단 파악 후 개정 검토”

▶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 道 반응·대책

9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에 도 요구사항 가운데 최대 현안인 개·폐회식장의 대회관련시설 인정이 받아들여져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게 도의 반응이다. ▶ 관련기사 1면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은 개·폐회식이 열리는 상징성 이외 올림픽 대회 이후 문화공연 공간이나 박물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도는 3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대회관련시설에 포함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국비지원율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도는 당초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지원율을 70% 이상 명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에 국비지원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해 반영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국비지원을 반영이 수포로 돌아가지 도는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 속에 정부지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에 국비지원율이 70%로 명시될 경우 나머지 30%의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지방비가 최소 3000억원 이상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율이 명시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비지원율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각 사업별로 70%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비가 매칭비율에 따라 50대 50이 되거나 그 이하로 지원 될 경우 도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지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에 실시되는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내용의 유불리를 따져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지원율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장단점을 파악중에 있다”며 “다음달 정부의 당초 예산안 윤곽이 드러나면 관련법과 시행령을 면밀히 따져 개정안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